



KIEP 기초자료
23-15

2023년 1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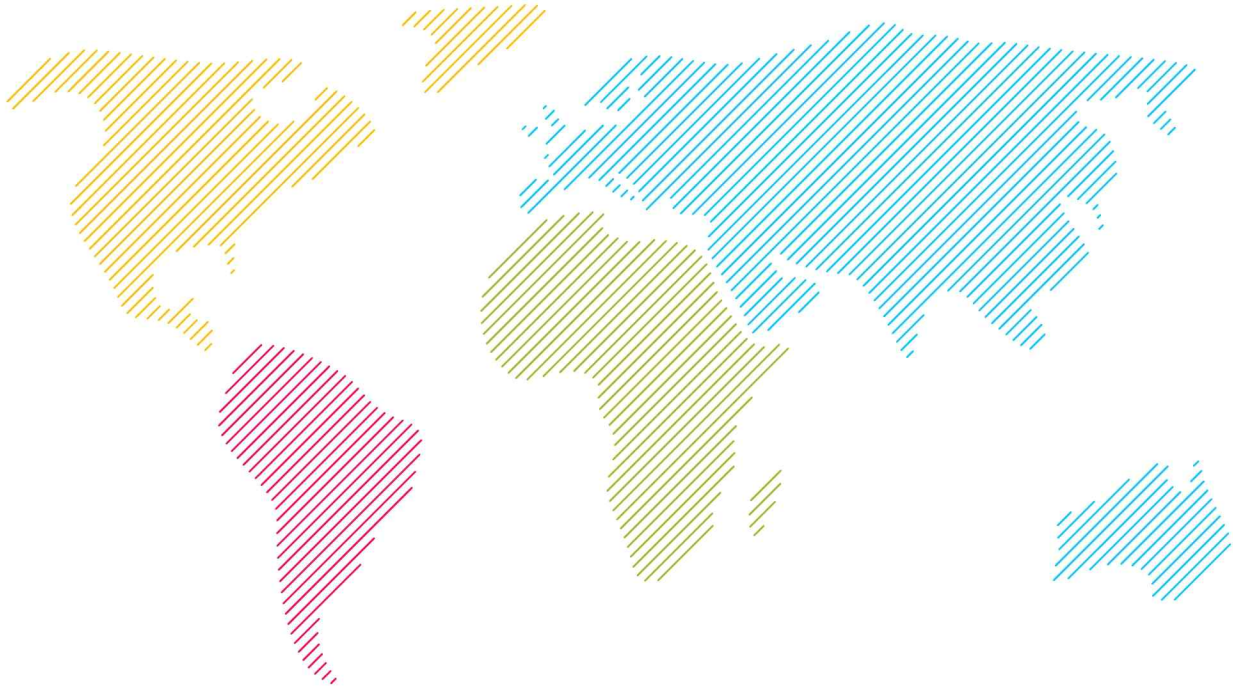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이주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044-414-1253)
박소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연구원
(sojeong@kiep.go.kr, 044-414-1241)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요약

- ▶ [연구 배경]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최근 발표된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ODA 지원규모 확대기조와 일치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위해 국민적 지지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24년도 ODA 예산안과 지난 11년간 실시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동 기간 유럽 지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국민인식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2024년도 ODA 정책 방향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추진’임.
 - 중점 지원 방향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에 집중,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임.
 -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사업관리 내실화, △성과관리 체계화, △대국민 인식개선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음.
-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최근 11년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개도국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정책 지지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ODA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국민은 사업 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53.3%),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45.9%)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우선 달성과제로 ‘빈곤종식’을 꼽았으며,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등을 중요한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음.
- ▶ [정책적 시사점]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리 ODA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가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되어 있어 국민인식 및 정책 지지도 제고가 필수적임.
 -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2년 ODA에 대한 인지도는 61.5%로 전년대비 2.8%p 감소하여 향후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인도적 지원(20.6%)과 교통(14.3%) 분야 등 상위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ODA 예산 확대에 대해 찬성여론은 26.9%에 불과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전략국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이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홍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됨.



차 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 가. 지원 규모 및 방향
 - 나. 중점 지원 분야 및 전략지역
 - 다. ODA 지원 목적 및 효과성 제고방안
3.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인식
 - 가. ODA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지지도
 - 나. ODA 정책에 대한 정보 수요
 - 다. ODA 예산 확대 여론
4. 우리나라 ODA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가. 중점 지원 분야 및 SDGs 과제
 - 나. 협력국가별 중요도
 - 다. ODA 지원 목적 및 효과성 인식
5.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
 - 가. 대국민 인식 제고
 - 나. ODA 지원 방향
 - 다. 지원 규모 및 대상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 8천억 원¹⁾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안은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을 제시하고, 중점 투자 방향을 △분쟁지역 지원/재난대응/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청년 및 기업의 해외진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지역 지원으로 설정함.
- 최근 발표된 예산안은 ODA 국정과제로 제시한 ODA 지원규모 확대기조와 일치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위해 국민적 지지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급격한 ODA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ODA에 대한 국민인식 추이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2024년도 ODA 예산안과 지난 11년간 실시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유럽 지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국민인식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내년도 ODA 예산안은 47개 부처 및 공공기관이 제출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중점지원 목표와 방향, 규모와 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국내에서 2008년부터 1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시행됐으며, 최근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만 19~7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ODA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협력대상 국가 및 분야, ODA 제공 동기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등을 점검하였음.²⁾
- 본고에서는 OECD DAC 회원국 중 EU 국민의 인식조사와 국제 비교를 위해 2011~22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변화추이를 확인하였으며(표 1 참고), 동 기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한 유로바로미터 조사 중 15개 OECD DAC 회원국 국민의 조사 결과를 분석함(표 2 참고).
- 국민인식과 정책 방향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지만, ODA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인지도를 가늠해보고, 인식과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1) 기관별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310억 원, 양허성자금 중 2,552억 원을 제외하면, 2024년 ODA 예산 요구액은 약 6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발표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관련 보고서는 윤정환 외(2023)을 참고.

표 1. 한국의 국민 ODA 인식도 조사 내역

연도	주관 부처 및 기관	보고서 제목	조사대상(응답자 수)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1,000명)
2012	국무총리실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1,000명)
2013	국무조정실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1,000명)
2014	국무조정실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최종보고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1,000명)
2015	한국행정연구원	(2015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만 19세 이상의 전 국민(1,000명)
2016	국무조정실	2016년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1,000명)
2017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만 19세 이상의 국민(1,000명)
2019	국무조정실	2019년 ODA 국민인식조사	만 19세~79세의 일반국민(1,000명)
2021	국무조정실	2021 ODA 국민인식 조사	만 19세~79세의 일반국민(1,000명)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국제개발협력 국민인식조사 결과 ³⁾	만 19세~79세의 일반국민(1,000명)

자료: 저자 작성.

표 2. EU DAC 회원국의 국민 ODA 인식도 조사 내역

발행연도	발행기관	보고서 제목	조사대상(응답자 수)
2011	EC ¹⁾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Europeans and the future of development aid	14개국 ²⁾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628명
2012	EC	Solidarity that spans the globe: Europeans and development aid	14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492명
2013	EC	EU development aid an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14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483명
2014	EC	The European year for development -Citizens' view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14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606명
2015	EC	The European year for development -Citizens' view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14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486명
2016	EC	EU Citizens' view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14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743명
2018	EC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4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412명
2019	EC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4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5,250명
2020	EC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3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4,529명
2022	EC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3개국 약 1,000명, 룩셈부르크 약 500명, 전체 14,227명

주: 1) EC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의미함.

2) EU 회원국 중 2011~19년 기준 OECD DAC 가입국은 총 15개국(영국·벨기에·덴마크·독일·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포르투갈·핀란드·스웨덴)이며,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3) 윤정환 외(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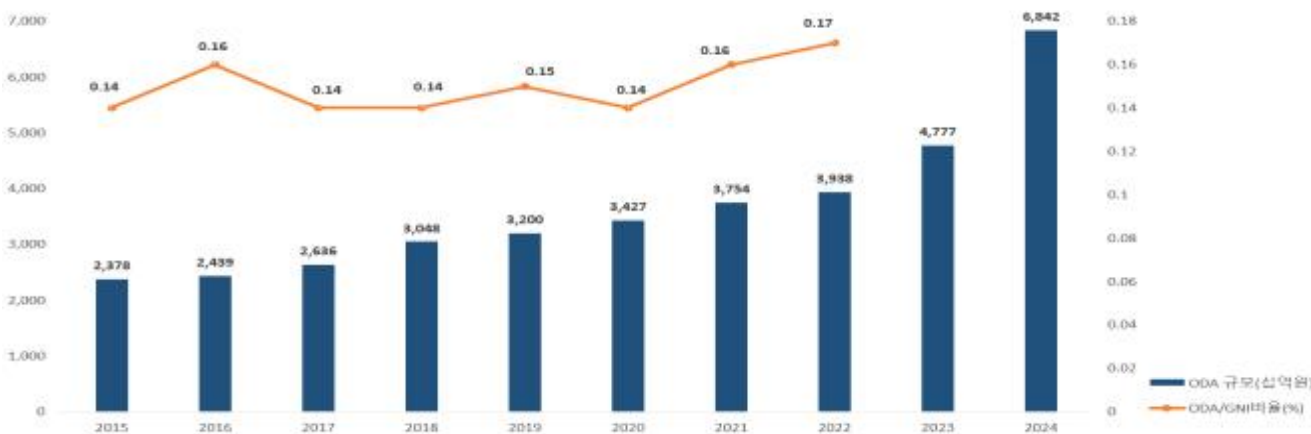
2. 2024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가. 지원 규모 및 방향

■ 정부는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024년도 공적개발원조(ODA)⁴⁾ 예산을 2023년 대비 2조 650억 원(43.2%) 증가한 6조 8,421억 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그림 1 참고).⁵⁾

- 6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하여 총 47개 부처 및 공공기관의 1,978개 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함.⁶⁾
 - 2023년 대비 ODA 예산(요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임(표 3 참고).
- 지원 방식에 따라 2024년 ODA 예산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자간 무상원조(증여) 3조 5,790억 원(52%), 양자간 유상원조(양허성 차관) 2조 721억 원(30%),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간원조 1조 1,910억 원(17%)으로 구성됨.

그림 1. 우리나라 ODA 지원 추이(2015~24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c),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p. 9.

4)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함.

5) 2024년 ODA 예산 요구액 기준으로 총 6조 8,421억 원이며, 이 중 기관별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310억 원, 양허성기금 중 2,552억 원을 제외하면 2024년 ODA 예산안은 약 6조 5,559억 원임(관계부처 합동(2023c) 기준).

6) 관계부처 합동(2023c)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6-1호).

표 3.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 및 증감률 변화(2023~24년)

(단위: 억 원)

ODA 시행부처 (기관)	2023 ODA 예산(확정)	2024 ODA 예산(요구)	2024년 증가액	전년대비 증가율	ODA 시행부처 (기관)	2023 ODA 예산(확정)	2024 ODA 예산(요구)	2024년 증가액	전년대비 증가율
국무조정실	111	122	11	10%	고용노동부	178	176	-2	-1%
기획재정부/EDCF	17,911	26,177	8,266	46%	관세청	111	158	47	43%
외교부/KOICA	17,619	29,495	11,876	67%	문화체육관광부	138	122	-16	-12%
농림축산식품부	1,101	1,860	759	69%	여성가족부	91	98	7	7%
산업통상자원부	706	1,501	795	113%	식품의약품안전처	60	80	20	34%
교육부/교육청	1,073	1,286	213	20%	통계청	42	65	23	55%
보건복지부	663	737	73	11%	기상청	57	56	-1	-1%
환경부	308	578	270	88%	법무부	51	53	2	5%
해양수산부	287	526	239	83%	경찰청	25	35	10	41%
농촌진흥청	334	404	70	21%	특허청	27	29	2	8%
인사혁신처	249	304	56	22%	국민권익위원회	2	3	2	94%
국토교통부	301	284	-16	-5%	조달청	2	3	1	67%
질병관리청	143	269	127	89%	감사원	3	3	-	0%
산림청	196	248	52	27%	국세청		1	1	
행정안전부	156	209	53	34%	공정거래위원회	1	1	0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0	201	22	12%	지방자치단체(13개)	61	82	21	34%
문화재청	47	195	148	3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9	4	107%
중소벤처기업부	56	190	134	241%	합계	42,289	65,559	23,270	55%

주: 사업예산 규모는 ODA 계상비율에 따라 ODA로 인정되는 액수만을 포함(유상 제외). 2024년 예산 요구액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관계부처 합동(2023c)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4년 ODA 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은 약 0.29%로 전망되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⁷⁾ 가입 시 권고된 ODA/GNI 0.7% 달성에는 크게 부족한 수치임.

- 2022년 기준 ODA/GNI는 0.17%로 OECD DAC 회원국 중 28위 수준이며, 2024년 ODA/GNI는 약 0.2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⁸⁾
- OECD DAC 회원국 평균 ODA/GNI는 0.36% 수준으로 한국이 2024년 ODA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DAC 평균치에는 부족한 상황임.

7)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donor)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함. 또한 DAC은 회원국간 개발협력 추진체계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한 동료검토(peer review), 지원실적 등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정지원 외(202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참고.

8) 국무조정실 브리핑자료(2023),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전 브리핑」, (6월 30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10. 19).

- 2024년도 ODA의 중점 지원 방향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집중, △대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 등임.
- 무상원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내역은 분쟁 및 재난 위기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전년대비 727% 확대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에 동참하고 향후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임.
 - 2023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ODA 지원액은 총 629억 원이었으나, 2024년 5,2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재건 사업 1,300억 원 △인도적 지원 2,600억 원 △국제기구 1,3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및 분야별로 ODA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것은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임.
-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전략적 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예정임.⁹⁾

나. 중점 지원 분야 및 전략지역

- [중점 지원 분야] 2024년도 양자간 원조 중 인도적 지원 분야와 교통 분야가 각각 올해 대비 9.6%p, 1.2%p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¹⁰⁾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6대 핵심 분야에 과학기술 및 ICT를 적용하고, 농업 부문 지원을 통해 식량원조를 중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 [인도적 지원] 이 분야에는 2023년 4,036억 원 대비 7,581억 원 증가한 11,6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무력 분쟁국에 대한 지원과 전후재건복구 사업, 재난위험관리 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임.
 - 분쟁지역 중 주요 대상 국가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멘 등이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2022년 3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우크라이나 침공의 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에 따라 공여국의 인도적, 경제적 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것임.¹¹⁾
 - 재건복구 사업에 대해 외교부, 국토부 등이 현재 지원 계획을 논의 중임.
 - 재난위험 관리 측면에서 튀르키예 지진 대응, 라오스 재해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과학기술·ICT] 수원국의 혁신역량에 따라 정부는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수산업,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기후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예정임.¹²⁾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3,390억 원, 무상원조는 5,8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지원해 오던 디지털 교육 사업과 개도국 정보센터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계획 수립

9) 기획재정부(2023a),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3월 28일), p. 28.

10) 2024년 분야별 ODA 예산 비중은 인도적 지원(20.6%) 교통(14.3%), 보건(8%), 공공행정(8%), 교육(6.2%), 에너지(6.5%), 농림수산(5.6%) 순으로 편성됨.

11) UN General Assembly(2022)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10. 30.).

12) 관계부처 합동(2022a),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22. 1.).

- 한국 기업과 인력 진출에 ODA를 활용하여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 수원국 관심도가 높은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행정제도·시스템(조달·건강보험·디지털정부·관세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운영하여 국가별 맞춤형 디지털정부 추진 기반을 조성할 예정
- *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튀니지, 페루, 세르비아 등

- **[식량원조]** 정부는 2024년도 식량원조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농업 ODA를 지원하여 취약 국가 및 계층에 대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UN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 국가인 예멘·에티오피아·케냐 등에 쌀 원조 규모를 기존 연 5만 톤에서 연 10만 톤으로 확대 지원 예정
- 한국형 쌀 자급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기술을 제공하는 ‘K-라이스 벨트’ 사업을 아프리카 7개국(가나, 기니, 감비아,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에 확대 추진
- 탄자니아, 가나 농업 전략 패키지 사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재원과 역량을 결합 활용
- 식량원조는 빈곤해소(SDG1), 기아종식(SDG2),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SDG5), 식품 낭비 및 폐기물 감소(SDG12) 등 다양한 SDGs 달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략지역]**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 등 국별 ODA 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 등 대외전략을 연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ODA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

- **[인도·태평양 지역]** 정부는 2022년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¹³⁾과 연계하여 인태지역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유·무상 원조 패키지, 분야별 거점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인태지역은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편
- * 세계 GDP의 62%, 한국 수출액의 78%, 수입액의 67% 비중 차지
- 정부는 2024년 지역별로 아시아(31.5%), 아프리카(17.7%), 중남미(8.1%), 중동·CIS(6.5%), 오세아니아(0.7%), 기타(35.4%) 순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
- 아세안 10국은 인태전략 상 우리나라의 최우선 협력대상국이며,¹⁴⁾ 이 중 6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서남아 5개국(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남미 4개국(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이 ODA 중점협력국에 해당하고, 개별 국가협력전략을 보유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 2024년 ODA 예산은 아프리카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 및 중남미 등에 대한

13) 외교부 보도자료(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12월 28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10. 20.).

14) 인태전략에서는 아세안을 양자 ODA의 31%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우선 협력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정부(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30.

ODA 예산 확충에 따라 전체 ODA 지원 규모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대비 1.7%p 감소한 17.7%(1조 19억 원)를 차지함.

- 정부는 올해 2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¹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2019년 지원액의 2배 이상 확대하기로 발표
- 현재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아프리카 7개국(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외에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발협력전략을 제시하여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목표로 (1) 보건 및 식량위기, 분쟁 등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2) 농업·제조업·도시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3)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산업 육성,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지원하기로 설정

다. ODA 지원 목적 및 효과성 제고방안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 2024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의 중점 기조인 ODA 확대 지원의 기본 목적은 새정부 ODA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임.¹⁶⁾

- 2022년 6월 발표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1)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 (2)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선진적·전략적 ODA 추진, (3) ODA 선진화와 혁신역량 강화, (4)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으로 설정

■ [청년인재 해외진출] 2024 예산안은 우리 기업 및 인력 진출에 ODA를 활용하여 청년인재의 해외진출과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외교통일 분야 자원배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¹⁷⁾

-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해외에서의 업무 처리 및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가질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해당 지역 또는 국제기구 개발협력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예산안은 기존 연간 3,000명의 청년인재 해외진출자 수를 4,00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분야 3,000억 원 확대 지원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임을 명시함.
- 청년들의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및 개발협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은 현지 중심의 ODA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사업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ODA 효과성 제고]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은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체계의 공고화 방안으로 △현지 사업관리 내실화, △성과관리 체계화, △대국민 인식개선을 제시함.

15) 관계부처 합동(2023b),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4-2호).

16) 관계부처 합동(2022b),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2-1호).

17) 기획재정부(2023b),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정부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고위급회담(2022년 12월 개최)에서 논의된 ‘현지주도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재외공관과 현지사무소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현지 사업관리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 시행계획은 국별 종합진단 결과를 국가협력전략과 성과관리 방안에 반영하고, 기관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단계별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2024년에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ODA 추진체계 전반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고자 함.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통합홍보 TF를 통해 국내외 언론과 SNS, 오프라인 행사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ODA 홍보를 활성화하고, ODA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

3.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인식

- 이하에서는 2011~22년간 실시된 우리나라의 ODA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유사 질문의 EU 조사와 비교하여 설명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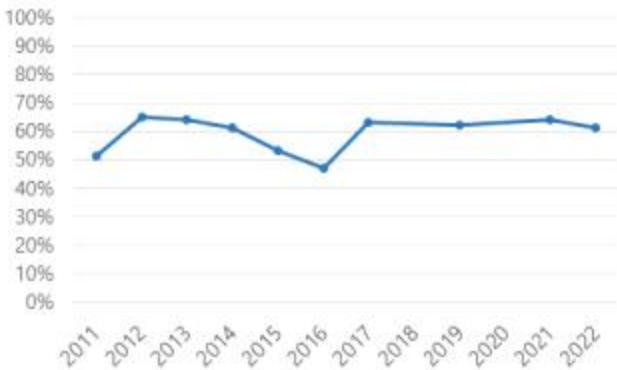
가. ODA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지지도

- 2022년도 ODA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ODA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난 11년간 평균 59.3% 수준을 유지해옴(그림 2 참고).
- 한국 국민의 ODA에 대한 인지도는 2012년 64.9%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였고, 2017년 63.0%로 1.8%p 급격히 증가하였음.
-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ODA에 대한 인지도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8%p 감소함.
- 2022년 기준 응답자의 75.2%는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EU DAC 회원국에서는 2019년 기준 89.7%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한국보다 다소 높은 정책 지지도를 보임(그림 3 참고).¹⁸⁾
- 한국의 경우 ODA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나, 2011년 이후 우리 국민의 찬성 여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EU 가입 DAC 회원국 국민의 평균적인 대외원조 제공 찬성 여론(86.9%)과 한국 국민의 ODA 제공 찬성 여론(87.0%)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한국의 찬성 여론이 감소하면서 격차가 발생함.

18) EU의 질문은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부를 주체로 두지 않아 한국의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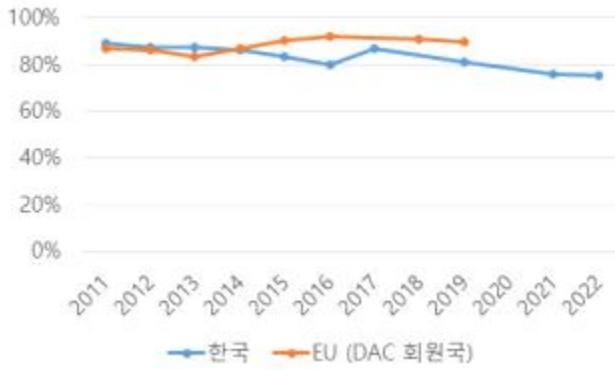
- 2019년 EU의 조사에서 15개국¹⁹⁾ 중 개도국 지원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한 국가는 포르투갈(96%)과 스웨덴(95%)이었으며, 낮게 평가한 국가는 오스트리아(82%), 프랑스(84%)였음.

그림 2. 한국의 ODA 제공 인지도



자료: 각 연도 ODA 국민인식도조사.

그림 3. ODA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한국 vs.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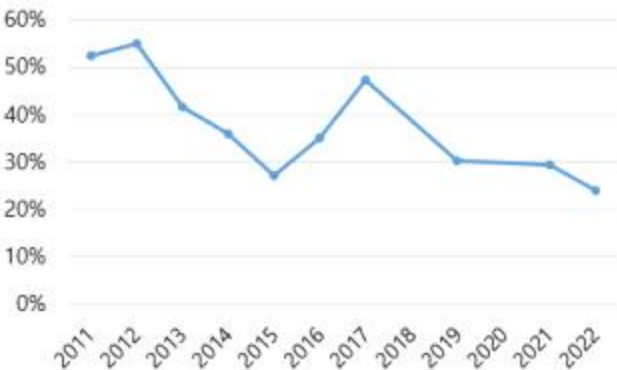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 ODA 국민인식도조사 및 유로바로미터 결과.

나. ODA 정책에 대한 정보 수요

- [정보 접근성] 2017년을 기점으로 ODA 정보에 대한 접근 경험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2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5.5%p 감소하여 전체 응답자의 24.0%만이 ODA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음(그림 4 참고).
- 2022년도 조사에서 ODA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242명의 응답자 중 67%(161명)는 '경험했던 정보가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답변함(그림 5 참고).

그림 4. 연도별 정보접근성



자료: 각 연도 ODA 국민인식도조사.

그림 5. 정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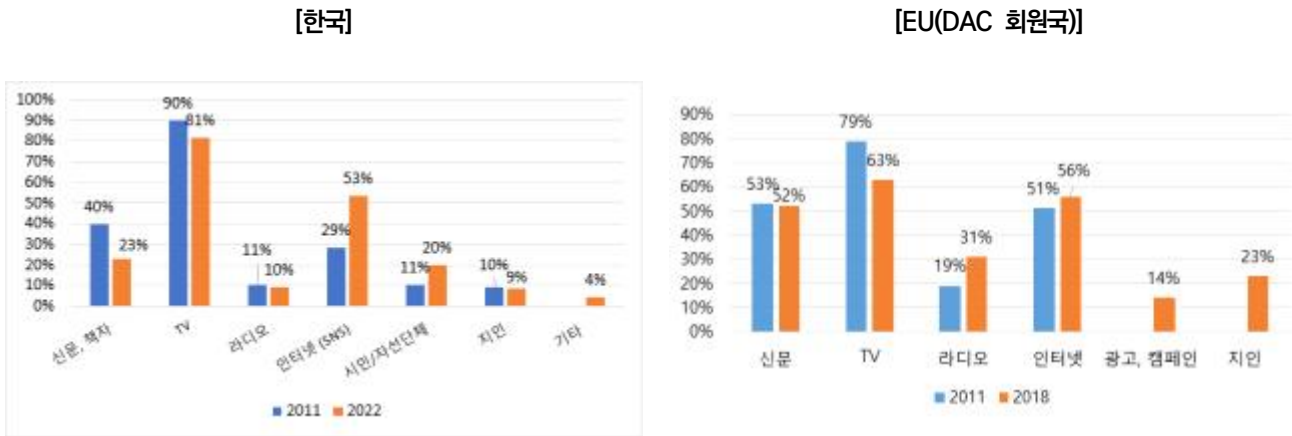
자료: 2022년 ODA 국민인식도조사.

19) EU 가입 OECD DAC 회원국은 2019년 기준으로 영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임.

■ [정보접근경로] 2022년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주로 TV(81.4%)와 인터넷(53.3%)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년도 조사에서 OECD DAC에 가입한 EU 회원국 시민 역시 주로 TV(63%), 인터넷(56%)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했다고 답변함(그림 6 참고).

- 대외원조 관련 정보는 일반 국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경향이 있으며,²⁰⁾ 2011년에는 한국과 EU DAC 회원국 모두 인터넷보다 신문을 통해 ODA 관련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나, 2022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ODA 정보를 접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아짐.
- 최근 한국에서는 인터넷과 시민단체/자선단체를 통해 ODA에 대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그림 6. ODA 정보접근 경로



주: [한국] 2011년도 조사에서는 해당하는 응답 모두 선택, 2022년도 조사에서는 1, 2순위 복수응답. [EU] 2011년 조사는 개발정책 및 빈곤퇴치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 모두 선택, 2018년 조사는 개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1, 2번째로 찾는 매체에 대해 질문. 자료: ODA 국민인식도조사(2011, 2022년), 유로바로미터(2011,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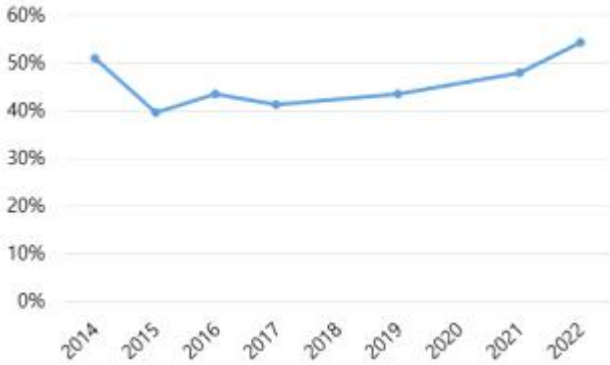
■ [관심 있는 정보] 2022년도 KIEP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54.5%가 'ODA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하여 실제 접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며,²¹⁾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 ODA 정보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7 참고).

- 2022년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ODA와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 여부(53.3%), △예산의 효율적 사용(45.9%)에 관심이 많았고, 이전 조사에도 두 항목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높은 편이었음(그림 8 참고).
- 전년 대비 국익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상승함.

20) 박복영 외(2014),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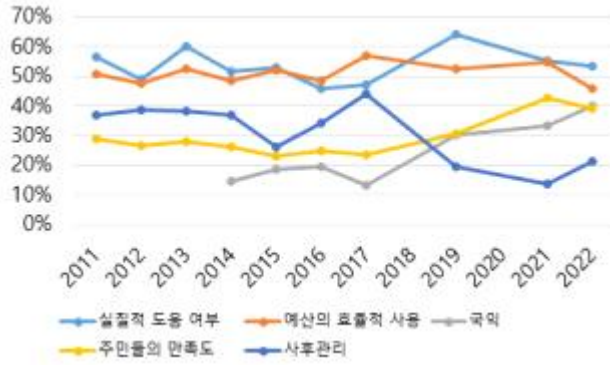
21) 2022년도 KIEP 국민인식도조사에서 ODA정보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545명) 중 92%(502명)는 '약간 관심이 있다', 8%(43명)는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는 응답자(455명) 중 13%(60명)는 '전혀 관심이 없다', 87%(395명)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변함.

그림 7. 정보 관심도



자료: 각 연도 ODA 국민인식도조사

그림 8. 연도별 관심있는 ODA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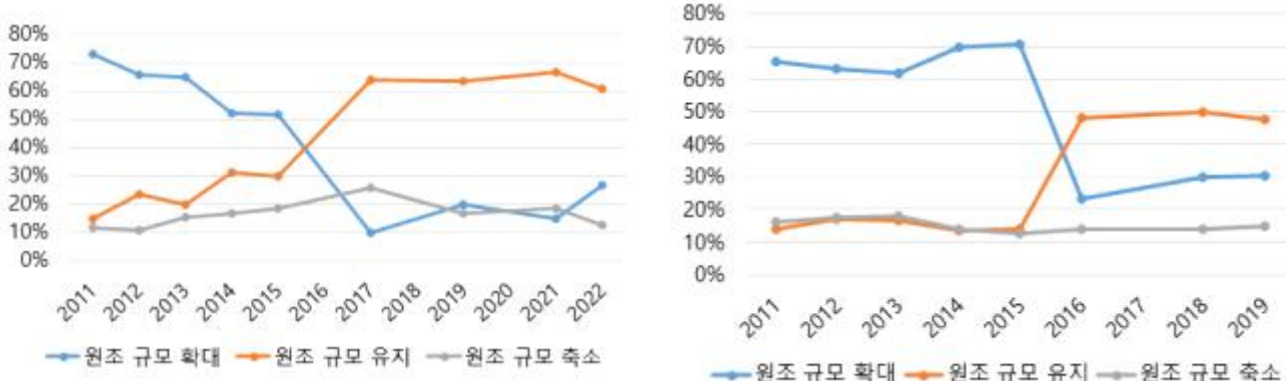


주: 2개 복수 응답.
자료: 각 연도 ODA 국민인식도조사.

다. ODA 예산 확대 여론

- 2022년도 국민인식도조사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ODA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EU DAC 회원국과 한국 모두 ODA 예산 확대 여론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한국의 경우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EU에 비해 더 높은 편임(그림 9 참고).
- 한국의 경우 ‘ODA 제공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년대비 12.7%p 감소한 26.9%,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4%를 기록함.
- 2019년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인식도조사에서 OECD DAC에 가입한 EU 회원국 국민의 약 47.7%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0.3%는 원조규모 확대, 14.9%는 원조규모 축소 의견을 나타냄.
- 한국과 EU DAC 회원국 모두 2011~15년에는 ODA 제공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유지 혹은 축소’에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많았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9. 연도별 ODA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한국, EU(DAC 회원국))



주: [한국] 설문지에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ODA 증액 계획을 명시했으며,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을 ‘원조 규모 축소’,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를 ‘원조 규모 유지’, ‘국제사회 권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와 ‘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를 ‘원조 규모 증액’으로 구분. [EU] 설문지에 EU의 구체적인 ODA 증액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 이상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혹은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를 ‘원조 규모 확대’로 구분함.
자료: 각 연도 ODA 국민인식도조사; 각 연도 유로바로미터.

■ ODA 제공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37.2%)’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36.4%)’이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54.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그림 10, 11 참고).

- 이 외에도 찬성 의견은 ‘국제적 이미지와 위상 강화(13.4%)’와 ‘경제규모 대비 적은 원조 규모(12.3%)’를 이유로 들었으며, 반대 의견은 ‘이미 원조 규모가 크다고 생각(17.7%)’하거나,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불확실하기 때문(15.3%)’이라고 응답함.

그림 10. ODA 규모 확대 이유



자료: 2022년 ODA 국민인식도조사.

그림 11. ODA 규모 축소 이유



자료: 2022년 ODA 국민인식도조사.

4. 우리나라 ODA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가. 중점 지원 분야 및 SDGs 과제

1)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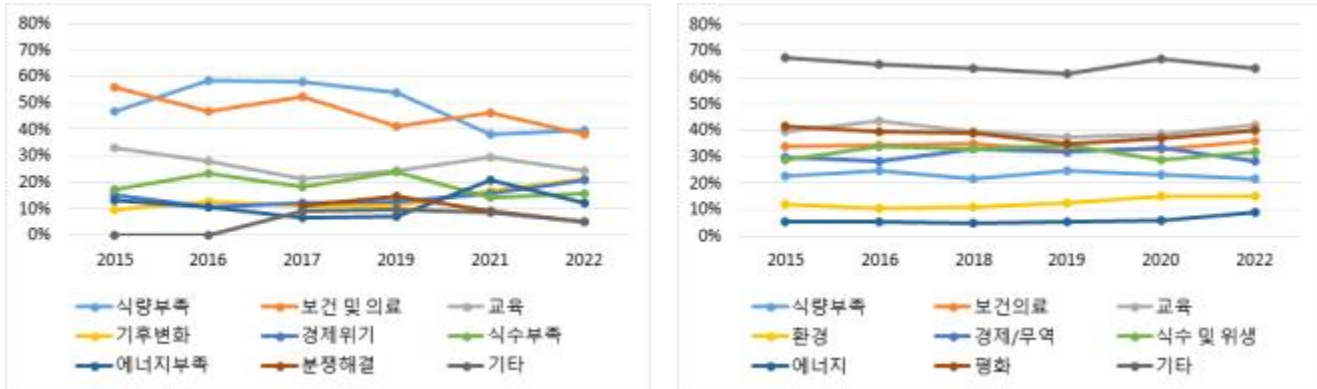
■ 202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도조사에서 한국 국민은 △식량부족(39.6%), △보건의료(38.1%), △교육(24.3%)을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EU DAC 회원국 국민은 △교육(41.8%), △평화/분쟁해결(40.1%), △보건의료(35.9%)를 개발도상국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함(그림 12 참고).

- 한국과 EU DAC 회원국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식량 문제와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으로,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분쟁해결(5.2%)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반면, 식량부족(39.6%)의 심각성은 크게 부각됨.

그림 12. 연도별 개도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

[EU (DAC 회원국)]



주: [한국] 2개 복수 응답. 기타에 △난민 △이민 △인권을 포함. [EU] 개도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최대 3개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음. 기타에 △거버넌스, △불평등, △성평등, △이민, △인구, △디지털화, △인프라를 포함.
자료: 각 연도 국민인식도조사; 각 연도 유로바로미터.

2) 개발도상국의 주요 SDGs 과제

- 2022년도 KIEP 국민인식도조사에서 빈곤 종식(SDG1), 기아 종식(SDG2), 건강 및 복지(SDG3), 식수 및 위생(SDG6) 이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 달성과제이자 개발도상국들이 최우선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선정됨(그림 13 참고).
- 최근 3년간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건강 및 복지(SDG3), 파트너십(SDG17),²²⁾ 빈곤 종식(SDG1)에 기여하기 위해 5조 718억 원 상당의 ODA를 제공하고, 7,272건의 ODA 사업을 추진하였음(그림 14 참고).
- o 우리나라의 건강 및 복지(SDG3)에 대한 지원 실적은 2019년에 2,863억 원을 기록하여 17개 세부 분야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4.1배 증가한 1조 1,781억 원을 제공하여 17개 SDGs 중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도 가장 많은 규모의 ODA가 제공됨.

그림 13. SDGs 세부목표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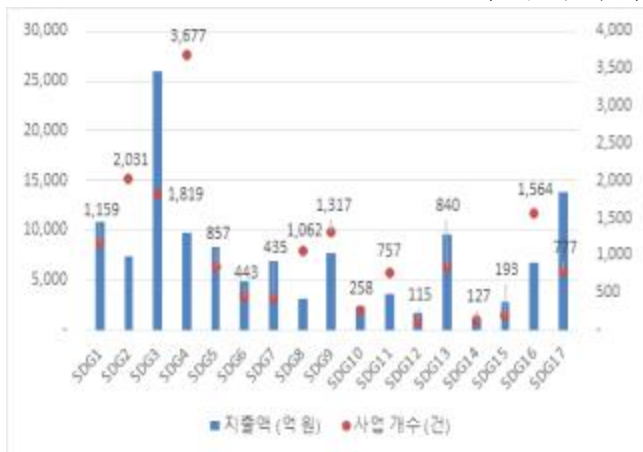
(단위: %)



주: 2개 복수응답.
자료: 2022년 국민인식도조사.

그림 14. SDGs 세부목표별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건)



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실적, 2019년부터 SDG 의무 지정
자료: ODA Korea.

22) 파트너십(SDG17)에 대한 사업에는 KOICA의 개발인식 증진 비용, 행정성 비용, 정보통신기술 관련 해외봉사단, EDCF의 사업성차관지원비,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파견비용, 외교부 및 고용노동부 등의 국제기구 분담금 등이 포함됨. ODA Korea의 통계보고서에서 각 기관이 직접 입력한 사업별 SDGs 마커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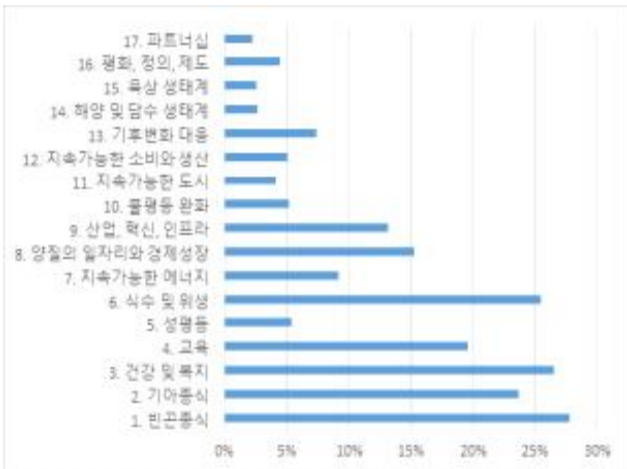
3)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SDGs 분야

■ 2022년도 조사에서 빈곤 종식(SDG1), 건강 및 복지(SDG3), 식수 및 위생(SDG6)이 우리나라가 ODA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됨.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ODA가 가진 분야별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SDG3), △경제 인프라(SDG9), △식량 및 농업(SDG2), △교육(SDD4)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답변이 지속적으로 많은 편이었음.

그림 15. 한국의 SDGs 세부목표별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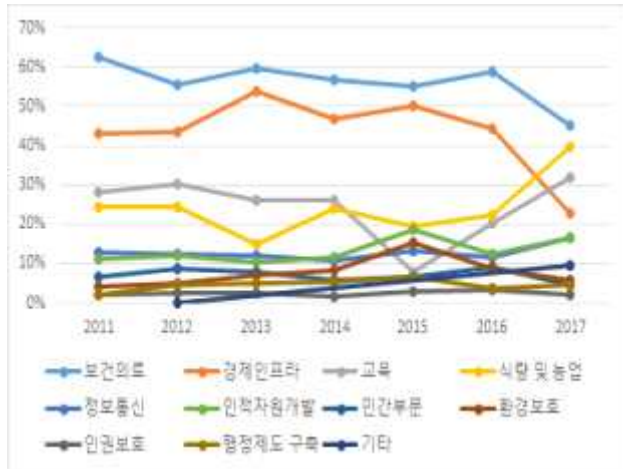
(단위: %)



주: 2개 복수응답.
자료: 2022 ODA 국민인식도조사.

그림 16. 한국의 분야별 비교우위

(단위: %)



주: 2개 복수응답. '기타'에는 △난민지원, △긴급구호가 포함됨.
자료: 각 년도 ODA 국민인식도조사.

나. 협력국가별 중요도

■ 2022년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베트남(43.4%), △필리핀(28.4%), △우크라이나(21.8%), △인도(20.4%), △인도네시아(19%)를 상대적으로 중요한 중점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표 4 참고).²³⁾

- 우크라이나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긴급성', 베트남·필리핀·인도는 '정치외교적 중요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중점협력국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중점협력국인 아프리카 국가 중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이집트, 르완다, 탄자니아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긴급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음.

23) 중점협력국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은 1,2,3순위를 묻는 복수응답형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순위와 관계없이 득표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음.

표 4. 중점협력국별 중요도 인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국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국가
인도주의적 지원의 긴급성	우크라이나, 몽골,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우간다, 세네갈, 파키스탄, 르완다, 탄자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볼리비아	인도주의적 긴급성 부재, 자생 가능	베트남, 필리핀,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이집트, 콜롬비아, 페루
해당 국가의 문제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이집트, 콜롬비아	해당 국가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미얀마,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치외교적 중요성	베트남, 필리핀, 인도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무관	몽골, 네팔, 라오스, 가나, 우간다, 파키스탄, 르완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경제적 긴밀성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낮음	-
해당 국가의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페루, 볼리비아	해당 국가의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낮음	스리랑카

자료: 2022 ODA 인식도 조사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ODA 상위 수원국은 베트남·방글라데시·필리핀·캄보디아·에티오피아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이들 국가에 1억 4,431억 원 상당의 ODA를 제공하고자 계획했으며, 그중에서도 베트남·필리핀은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점협력국에 해당함(그림 17 참고).
- 우크라이나와 인도에 대해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2021년에 신규로 추가된 5개국 중 3개국(타지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은 27개 중점협력국 중 지원실적 및 계획이 가장 저조한 국가에 해당함.

그림 17. 중점협력국별 ODA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억 원)



자료: ODA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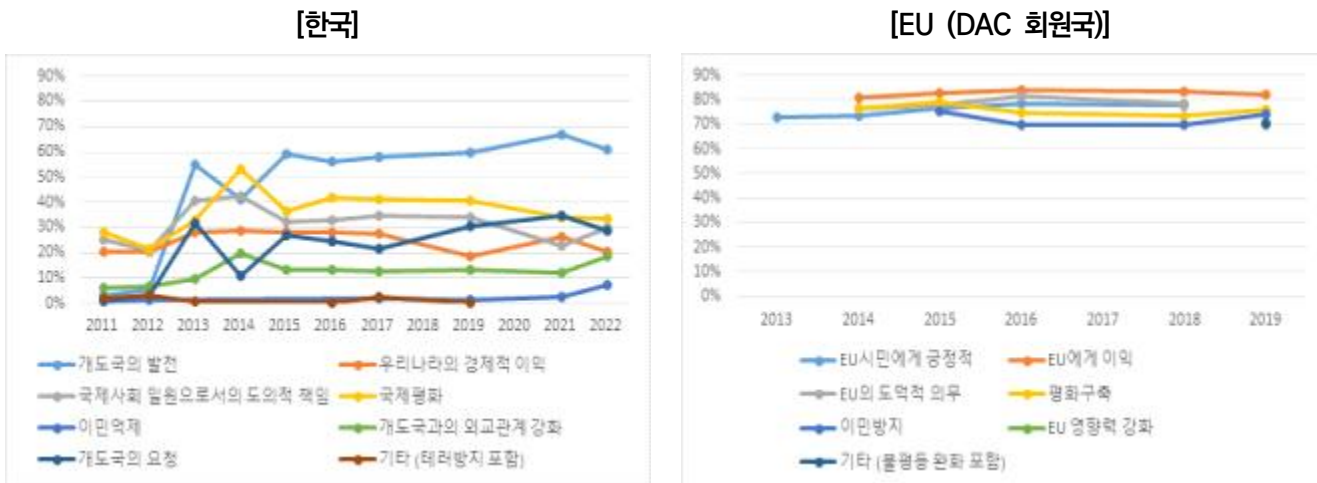
다. ODA 지원 목적 및 효과성 인식

1) ODA 지원 목적

■ 2022년도 KIEP 국민인식도조사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주요 이유로 응답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39%), △전쟁·테러 방지 등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34%),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도의적 책임(30%)은 꾸준히 ODA 제공 동기로 제시되어 왔음.

- 2019년도 조사에서 OECD DAC에 가입한 EU 회원국 시민은 △EU의 이익(82%), △평화 구축(76%)이 EU가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라고 답변함.

그림 18. ODA 지원 목적



주: [한국] 2011년(1개 응답)을 제외한 6개년도 조사에서는 2개 복수 응답. [EU] 한국과는 다르게 각각의 분야가 ODA 지원 동기임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매년 동일한 부문에 대해 질문한 것은 아님.
자료: 각 연도 ODA 국민 인식도조사; 각 연도 유로바로미터.

2) ODA의 효과성

■ 2022년도 KIEP 국민인식도조사에서 전년대비 3.8%p 감소한 79.1%의 응답자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에 미치는 ODA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OECD DAC에 가입한 EU 회원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7.8%의 응답자가 'EU와 회원국의 개발정책 및 재정지원이 개도국의 빈곤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답변함.

■ 2022년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개도국 국민과 사회의 자립(83.3%),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79.1%)에 ODA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함.

- ODA가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62.8%), 한국 상품 구매 여건 개선(68.6%)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5.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대국민 인식 제고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ODA에 대한 인지도는 61.5%로 전년대비 2.8%p 감소하여 향후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에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은 인지도에 비해 높은 편(75.2%)이나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ODA에 대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은 24.0%에 불과하여 보다 적극적인 ODA 홍보 및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것임.
- 국민의 ODA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통합홍보 TF를 통해 국내외 언론과 SNS를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 11월 25일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계획 하고 있음.²⁴⁾
-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TV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ODA 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 궁금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투명성 강화와 정책 지지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나. ODA 지원 방향

- 2024년 ODA 예산안은 인도적 지원(20.6%)과 교통(14.3%)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보건(8.0%), 교육(6.7%), 농림수산(5.6%)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바, 상위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국민은 △식량부족(39.6%), △열악한 보건의로 환경(38.1%), △열악한 교육환경(24.3%)을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내전 등 안보불안(12.1%)이나 △난민 문제(5.1%)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 한편 우리 정부는 2024년 ODA 예산안을 통해 무력분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대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목표를 발표함.
-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17개 SDGs 목표 중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한국 국민은 빈곤 종식(SDG1), 건강 및 복지(SDG3), 식수 및 위생(SDG6)을 선택하였으나, 지난 3년간 SDGs 세부 목표별 지원실적은 건강 및 복지(SDG3), 파트너십(SDG17), 빈곤 종식(SDG1), 교육(SDG4), 기후변화(SDG13) 등이 높았음.

24) 관계부처 합동(2023c).

- SDG17 파트너십 목표는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기구 인력파견 비용, 정보통신기술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24년 ODA 지원 목적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이행, 국내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에 부합함.

다. 지원 규모 및 대상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올해 대비 43.2% 이상 ODA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ODA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기여 및 대외전략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전략적 ODA를 추진하는 것임.

- 한국 국민의 ODA 확대 찬성 여론은 전년대비 증가한 26.9%이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60.7%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ODA 예산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OECD DAC 가입 EU 회원국 국민의 ODA 확대에 대한 여론 역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 찬성 의견은 30.3%, 현재 수준 유지 의견은 47.7%, 축소 의견은 14.9%임.
- ODA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우리 경제에 도움(37.2)’,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36.4)’, ‘국가적 위상 강화(13.4)’ 등을 제시하였으나, 반대하는 이유로는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54.8)’이라는 의견이 많아 경제상황에 따라 국민적 지지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 인·태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계획은 대외전략과 ODA 정책 간의 정합성(coherence)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나, 해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점 및 이미 지정한 27개 ODA 중점협력국 중 14개국만이 인·태전략에 포함된 점을 통해 전략지역과 비전략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7개 ODA 중점협력국 중 국민은 △베트남(43.4%), △필리핀(28.4%), △우크라이나(21.8%), △인도(20.4%) 등을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ODA 상위 수원국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순으로 나타남.
- 일부 상위 수원국에 대해 국민은 (1) 인도주의적 긴급성이 없고, 자생할 수 있을 것 같거나(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2) 그 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에티오피아 등)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함.
-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협력국가와의 ODA 사업 성과나 협력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높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2a.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0-2호).
 _____. 2022b.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2-1호).
 _____. 2023a.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4-1호).
 _____. 2023b.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4-2호).
 _____. 2023c.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6-1호).
- 권율, 박수경, 이주영. 2011.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이주영. 2012.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수탁연구보고서.
- 권율, 이주영, 유애라. 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수탁연구보고서.
- 기획재정부. 2023a.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3월 28일)
 _____. 2023b.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김은주, 윤수재, 윤건, 김경우, 이은중, 김황열, 송홍. 2019. 「2019년 ODA 국민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박복영, 김형중, 박진수, 엄주석. 2014.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무조정실 수탁연구보고서.
- 박정호, 김은주, 김윤희, 권지윤. 2017. 「2017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수시과제 2017-01. 한국행정연구원.
- 박정호, 이도석. 2015. 「2015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PA 조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윤정환, 이은석, 송지혜, 윤혜민, 박소정. 2023.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열, 손종욱, 김윤희, 윤현빈. 2021. 「ODA 국민인식도 조사」. 글로벌알앤씨(주). 국무조정실 수탁연구보고서.
- 전승훈, 김소원. 2016. 「2016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주)월드리서치. 국무조정실 수탁연구보고서.
-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최현양. 202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1. "Special Eurobarometer 375 Report: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Europeans and the future of development aid."
- _____. 2012. "Special Eurobarometer 392 Report: Solidarity that spans the globe: Europeans and Development aid."
- _____. 2013. "Special Eurobarometer 405 Report: EU development aid an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_____. 2014. "Special Eurobarometer 421 Report: The European Year for Development - Citizens' view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_____. 2015. “Special Eurobarometer 441 Report: The European Year for Development - Citizens’ view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_____. 2016. “Special Eurobarometer 455 Report: EU Citizens’ view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_____. 2018. “Special Eurobarometer 476 Report: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_____. 2019. “Special Eurobarometer 494 Report: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_____. 2020. “Special Eurobarometer 512 Report: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_____. 2022. “Special Eurobarometer 537 Report: EU citize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온라인 자료]

국무조정실 브리핑자료. 2023.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전 브리핑」. (6월 30일).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78083&pWise=sub&pWiseSub=C5>(검색일: 2023. 10. 19.).

외교부 보도자료. 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12월 28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6(검색일: 2023. 10. 20.).

UN General Assembly. 2022.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66630?ln=en>(검색일: 2023. 10. 30.).

[통계 자료]

ODA Korea. <https://stats.odakorea.go.kr/portal/odakorea/detail>(검색일: 2023. 9. 11.).